"수요자 중심의 법령체계도 구축" 기본계획

◇ 그동안 기관별·기능별로 분류되어 공급자 위주로 국민에게 제공되었던 법령정보를 '수요자' 관점에서 재분류하여 제공

◇ 전문가 중심의 법률 인프라를 '국민'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 마련

Ⅰ. 추진 배경 및 경과

1. 추진 배경

□ **현행 법령 정보**는 공급자 위주로 제공되어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법령정보를 **체계적으로 파악**하기가 **쉽지 않음**

※ (예시) 종합법령센터: 헌법, 국회, 선거, 행정, 공무원, 외무 등 기능별로 편제

□ 세계화 진행, **FTA 체결**을 계기로, 우리 **법제·정책**의 **수준**은 물론, 그 **투명성**을 높이 것은 **시대적 요청**

※ 주한 EU대표부 대사(Dorian F. Prince.): 한국투자에서 느끼는 가장 큰 걸림돌은 법제도의 불확실성으로, 법령해설서 발간 등을 요청 ('06. 8.)

⇒ **법령**을 **수요자 관점**에서 분류·정리하여 **국민**이 **쉽게 이해**하고 친근하게 **접근**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

2. 추진 경과

□ **국무회의** 시(2007. **4. 17, 5. 8) 대통령**께서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정책과 **법제 정보 제공·공개의 중요성과 필요성 강조**

※ 법제처의 법령심사 기능에 부가하여 **법령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혁신을** 강조하고, **"수요자 중심의 법령체계도"를 구축할 것을** 제안 (혁신관리수석, '07.4.5)

□ 2007. 4. 25. **혁신관리비서관실** 주도하에 사업 추진을 위한 **관계기관 TF 구성, 추**진방안 협의 (3회)

※ TF 구성: 혁신관리비서관실, 법제처·국무조정실·중소기업청 등 참여

□ 2007. 5. 23. **혁신 차관회의** 시 법제처에 수요자중심 법령체계도 구축계획의 조속한 마무리 요청 (혁신관리수석)

('07.6.21, "수요자 중심의 법령체계도 구축" 기본계획, 혁신관리비서관실)

Ⅱ. 법령체계도 구축의 기본방향

< 기본방향 요약 >

◈ **정보제공 범위**: 법령체계도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'**법령정보**'에 한정

◈ **추진 방식**: '시범사업 → 각 기관 확산 → 정부포털 구축'의 **3단계**로 나누어 **단계적**으로 **추진**

◈ **추진 대상**: 구축효과가 큰 '**주요 수요자**' 집단부터 구축

1. 정보제공 범위: 원칙적으로 '**법령정보**'에 한정하여 제공

○ **정책**은 상대적으로 **가변성**이 크므로 **현 단계**에서는 **제도화**되어 **안정적인 법령정보**에 **한정** (조문 설명 등으로 보완)

⇒ **법령체계도 구축** 후, **정책정보**까지 **병행 제공** 고려

2. 추진 방식: 세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구축 추진

○ 현행 법령의 건수를 고려할 때 **단기적**으로 **모든 법령(수요자)**에 대해 **법령체계도**를 작성하는 것은 곤란

※ **법령 건수**: 헌법 1건, 법률 1,179건, 대통령령 1,570건, 총리령・부령 1,415건 (**총 4,165건**, 훈령 약 8,700여건 포함 시 약 **12,800여건**, 2007. 5. 31. 현재)

○ 금년 9월까지 **시범사업**을 실시한 후, **단계적 확산 추진**

1 단 계 (2007. 6. ~ 9.) (시범사업 실시)		2 단 계 (2007. 10. ~ 2008. 2.) (주요 수요자 확산)		3 단 계 (2008. 3. ~) (전체 수요자 확산)
▪ **수요자 분류기준** 작성 ▪ 법령체계도의 **절차・방법・기준** 마련 (기본틀, 연계·갱신 방안) – 법제처 · 용역팀 –	➡	▪ 전체・주요 **수요자 분류** (각 기관 협조) ▪ 시범사업의 **절차・방법・기준 활용** – 법제처, 주요 기관 –	➡	▪ **각 기관**이 **법제처**와 함께, **전체 수요자를 대상**으로 작성 (정부 포털 구축 병행) – 법제처, 모든 기관 –

※ 행정자치부와 협의, 「차세대 전자정부 추진계획」의 과제에 반영 추진

3. 추진 대상: '주요 수요자 집단'부터 단계적 추진

○ 파급 효과가 큰 **수요자 집단**부터 구축하면서 **점진적**으로 **확산**

('07.6.21, "수요자 중심의 법령체계도 구축" 기본계획, 혁신관리비서관실)

Ⅲ. 수요자 분류와 법령체계도의 주요 내용

1. 수요자 분류

□ '수요자 분류기준'의 작성

○ 부처별 시각에서 벗어나 **고객 관점**에서 '**수요자 분류기준**' 마련

* 시범사업 기간 중 각 부처를 대상으로 수요자 분류체계에 대한 조사를 병행 추진

□ 전체 및 주요 수요자 분류

○ **법제처**가 **관계 기관**과 **협의**하여 주요 및 전체 수요자를 분류

<붙임 1> 법제처 '종합법령정보센터'에서의 '수요자 분류' 예시

2. 법령체계도의 주요 내용

◆ 한번의 클릭(one-click)으로 수요자와 관련된 **모든 법령정보**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**입체적·체계적으로 화면 구성**

가. 구축 시 고려사항

○ 수요자 관점에서 법령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기존의 유사 사례<붙임 2>와 긴밀히 **연계·보완**하고 **체계도 등**을 **벤치마킹**

- 규제맵(국조실), 중소기업정책포털(중기청), 통합 전자민원(행자부),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 중 대국민 서비스혁신 과제(행자부)

○ **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**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**업데이트**

나. 기본화면 구성

□ **1차 화면** (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
○ **수요자**가 해당 분야 **업무 흐름**을 **한눈**에 알 수 있도록 **업무프로세스를 도식화하되, 각 업무단위별**로 표시

□ **2차 화면**

○ **1차 화면**에서 선택한 **업무단위**별로 **핵심 내용**을 **설명**하고, **구체적인 근거 조문**(법규적 성격의 주요 훈령 등까지 포함) 명시

('07.6.21, "수요자 중심의 법령체계도 구축" 기본계획, 혁신관리비서관실)

□ **3차 화면**

○ **2차 화면**에서 선택한 **법령별**로 **규정 원문**(별표·서식 포함)과 **관련된 참고자료**(입법 취지, 행정심판/대법원/헌법재판소 결정례 등) 제공

<붙임 3> 일반 음식점(신고) 창업자를 위한 법령체계도 기본화면

Ⅳ. 법령체계도 구축 시범사업의 실시 방안

1. 시범사업의 선정 기준

기 준	내 용
1. 수요자의 규모와 구분 가능성	▪ 혜택을 받는 **수요자**의 **규모**가 크면서도 **의미 있는 수요자 집단**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
2. 수요자의 법령정보 접근 가능성	▪ 정보격차 등으로 인해 **법령정보**에 상대적으로 **접근**이 어렵거나 **접근 빈도**가 낮은 분야 ▪ 여러 부처 **소관 법령이 얽혀 있고 내용이 복잡**하여 법령체계도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
3. 국민생활에의 파급 효과	▪ 법령정보가 **계속적으로 필요**하면서 **국민생활**에서 그 중요성이 커서, 법령체계도 구축의 **파급 효과** 바로 나타날 수 있는 큰 분야
4. 사회 변화와 대외 신인도 등의 고려	▪ 향후 사회 변화를 고려하여 법령체계도 필요 **수요자 집단이 증가**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**대외 신인도**를 높이기 위해 특별히 **필요한 분야**

2. 시범사업 선정 결과

○ 위의 기준에 따라 **5대 시범 수요자 선정**

- 서비스업자 (일반음식점업 창업), 장애인 (고용), 영유아 보육 관련자, 운전면허 소지자,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

<붙임 4> 시범사업 대상 수요자의 선정 사유와 주요 구축 내용

('07.6.21, "수요자 중심의 법령체계도 구축" 기본계획, 혁신관리비서관실)

Ⅴ. 법령체계도 구축 시의 기대 효과

□ **(국민) 부처간 정보의 통합·연계로 국민 편익 및 만족도 제고**

○ 수요자 중심에서 **부처간 정보**를 **통합 · 연계**시켜 제공함으로써, **국민 편익 증진**

-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**관련 법령**의 **체계**와 **내용**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**국민 만족도** 극대화

○ 여러 부처의 관련 업무를 수요자 입장에서 이해함으로써 **부처 이기주의**를 **해소**하고, **국민**을 위한 **부처간 협력 원활화**

□ **(공무원) 수요자 관점의 법령 입안 · 심사 및 규제개혁 가능**

○ 법령 **입안 · 집행** 시 **수요자 관점**에서 관련 사항을 **종합적으로 검토 · 심사**함으로써 **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** 추진이 가능

□ **(대외) 법제정보의 투명성 제고로 대외 신인도 제고**

○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서비스에 맞는 **고품질의 정보 공급 체계** 구축으로 **대외적 투명도 · 신인도** 향상

○ 법령정보의 일반화 · 보편화로 변호사 등 **법률 전문가**의 **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 제공**과 법률시장 개방에 전문적 대응 가능

□ **(홍보) 국민의 법령이해도 제고로 정책집행 및 홍보 효과 제고**

○ 법령 **수요자**의 **이해도**와 **관심도를** 높임으로써 **원활한 법령 집행**과 정책 · 법령의 **효과적인 홍보** 가능

※ 미국 지방정부[샌디에이고(San Diego) 등] : 소상공인 창업 상담 시 수요자 위주의 관련 법령정보 등을 모아놓은 책자를 제공

('07.6.21, "수요자 중심의 법령체계도 구축" 기본계획, 혁신관리비서관실)

<붙임 1>

법제처 '종합법령정보센터'에서의 '수요자 분류' 예시

현 행	1편 헌법	2편 국회	3편 선거	4편 행정	5편 공무원	·· ·· ··	44편 외무
⇩		⇩		⇩			⇩
구축 후 수요자 분 류 추 가 (예 시)	1편 헌법	2편 국회	3편 선거	4편 행정	5편 공무원	·· ·· ··	44편 외무
··	근로자	노 인	서비스 업 자	여 성	장애인	·· ··	청소년

분 류	··	서비스업자	··	여 성	··	장 애 인	··
1단계 하위메뉴		▪ 식품접객업 ▪ 숙박업 ▪ 유통업 : : ▪ 금융업		▪ 보육 관련 여성 ▪ 취업 희망 여성 ▪ 결혼이민자 여성 : : ▪ 성희롱 피해자		▪ 장애인 교육 ▪ 장애인 사회참여 ▪ 장애인 일자리 : : ▪ 여성 장애인	
2단계 하위메뉴		▪ 일반음식점업 - 창업 - 영업 ▪ 휴게음식점업 ▪ 유흥주점 : ▪ 제과점		▪ 영유아 보육 ▪ 보육시설 설치 ▪ 보육시설 운영 : : ▪ 보육 관련 지원		▪ 영아 교육 ▪ 유아 교육 ▪ 초・중등 교육 : : ▪ 고등 교육	
3단계 하위메뉴		▪ 일반음식점업 (신고) 창업 관련 법령체계도		▪ 영유아 보육 정보가 필요한 여성 관련 법령 체계도 제공		▪ 영아 교육 정보가 필요한 장애인 관련 법령체계도 제공	

※ 밑줄(음영) 부분을 선택하면 하위 메뉴로 이동

※ 3단계 하위메뉴에서는 해당 분야에서 구축된 '법령체계도'를 제공

('07.6.21, "수요자 중심의 법령체계도 구축" 기본계획, 혁신관리비서관실)

<붙임 2>

수요자 관점 정보제공 유사 사례

1. 규제맵 (국무조정실: 규제개혁위원회, www.rrc.go.kr)

□ 개요

○ 여러 부처와 관련된 복잡한 규제정보를 **규제 간 상호 연관성, 단계별 경로**에 관한 **정보**를 종합하여 **규제의 체계, 프로세스, 상호 관계**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식화한 **규제 지도**

※ 2007. 5. 현재,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맵, 공장설립(개별입지)에 관한 규제맵 등 2개의 규제맵 서비스 중

□ 내용

○ **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**이 있는 분야로서 관련 규제가 복잡한 분야나 관련 규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**규제개선 방향**을 **설정**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분야 중 **규제맵 작성 대상 선정**

○ 선정된 분야와 관련된 **모든 규제**를 **전수(全數) 조사 → 사업단계별 분류 → 상호관계 분석** 과정을 거쳐 도식화

○ 규제맵상 **업무처리 흐름도**의 **각 단계**를 **클릭**하면 각 단계별 **상세 설명서** 제공

※ 참고: 2007년 중 작성 예정 10개 분야

- 자동차 구매·관리 관련 규제, 농산물(양곡) 생산·유통 관련 규제, 관광단지 개발관련 규제, 골프장 건설 관련 규제, 온천 등 개발 관련 규제, 서민금융업 설립·운영 관련 규제, 학교법인·학원 등 설립 관련 규제, 폐기물 처리 관련 규제, 주유소 설치·운영 관련 규제, 해상운송 사업 관련 규제

2. 중소기업 정책포털 (중소기업청, www.spi.go.kr)

□ 개요

○ **160여개 부처·기관**별로 나뉘어 제공되는 **중소기업 정책정보**를 300만 **중소기업의 관점**에서 쉽게 검색·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**범정부 차원의 통합정책정보망**을 구축함으로써 **맞춤형 정책정보** 제공

('07.6.21, "수요자 중심의 법령체계도 구축" 기본계획, 혁신관리비서관실)

□ 내용

○ **각 부처**와 **기관**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정보를 **수집·가공**하여 **7대 분야**(자금, 기술, 정보화, 인력, 창업·소상공인, 판로·수출, 규제)에 대한 **통합 정책정보 DB** 구축

※ 정책정보는 자동수집 시스템(API)과 웹 스크래핑(Web-scraping)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DB 관리자가 가공·관리하도록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업데이트가 가능

○ 통합 정책정보 DB에 수록된 **각종 정보**를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**통합검색 시스템** 구축

※ **(종전: 공급자 관점의 정보제공)**: 수요자가 각급 부처·기관 홈페이지 개별 접속 → 필요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메뉴·게시판 탐색 → 필요로 하는 정보가 수집될 때까지 계속 탐색

※ **(변경: 수요자 관점의 정보제공)**: SPi 시스템 접속 → 자연어 검색 → 각 부처·기관의 정책정보 중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실한 내용으로 즉시 제공

3. 통합전자민원창구 (행정자치부, www.egov.go.kr)

□ 개요

○ **국민**이 **민원**을 **쉽게 처리**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의 **각종 민원사무**를 12대 분야로 구분하여 민원의 내용, 처리절차, 처리방법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는 **온라인 포털**

※ **12대 분야(총 5,000여종의 민원)**: 개인과 가정(278종), 부동산과 재산(139종), 세금과 재정(429종), 기업과 경제(351종), 농림수산과 천연자원(573종), 제조 건설과 개발(814종), 서비스와 생활(591종), 사회보장과 복지(861종), 자연과 환경(270종), 문화와 여가(263종), 통일과 국방(108종), 교통과 물류(457종)

□ 내용

○ **5,00여종**에 관한 **각종 민원**에 대해 민원종합 안내, 분야별 안내, 색인별(가나다 순) 안내 등의 **검색서비스 제공**

※ 민원별로 처리기관, 구비서류, 수수료, 처리기한, 관련법제도 등에 대한 정보 제공

○ **650종**의 민원에 대해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**민원신청 서비스 제공**

○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을 바로 출력하여 문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**30여종**의 민원에 대해 **민원발급 서비스 제공**

('07.6.21, "수요자 중심의 법령체계도 구축" 기본계획, 혁신관리비서관실)

4.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 중 대국민 서비스혁신 과제

□ 기업지원 단일창구 서비스(산업자원부, www.g4b.go.kr)

○ **기업의 관점**에서 **'하나의 정부'**로 인식되도록 정부기관이 기 구축한 **정보 자원을 종합**하여 제공하는 **허브 포털**을 구축하여 정보자원의 활용 극대화

○ **온라인 단일창구**를 통해 **기업 민원**의 처리, **종합안내**, 각종 **산업 정보**의 제공과 그 밖에 **컨설팅** 등 부가서비스 제공

※ 민원관련 서비스는 민원과 관련된 처리흐름도, 관련 제도, 구비서류, 유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

○ **2005년 7월 1단계 서비스 구축** 완료, 2007년 현재 지속적인 컨텐츠 확보 등 2단계 서비스 구축 추진 중

※ 1단계 서비스 구축을 통해 199종의 기업민원 행정 안내, 40개 사이트의 2만여 산업정보 컨텐츠 연계 제공 등의 서비스 제공

□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(산업자원부, 법무부, 노동부, www.g4f.go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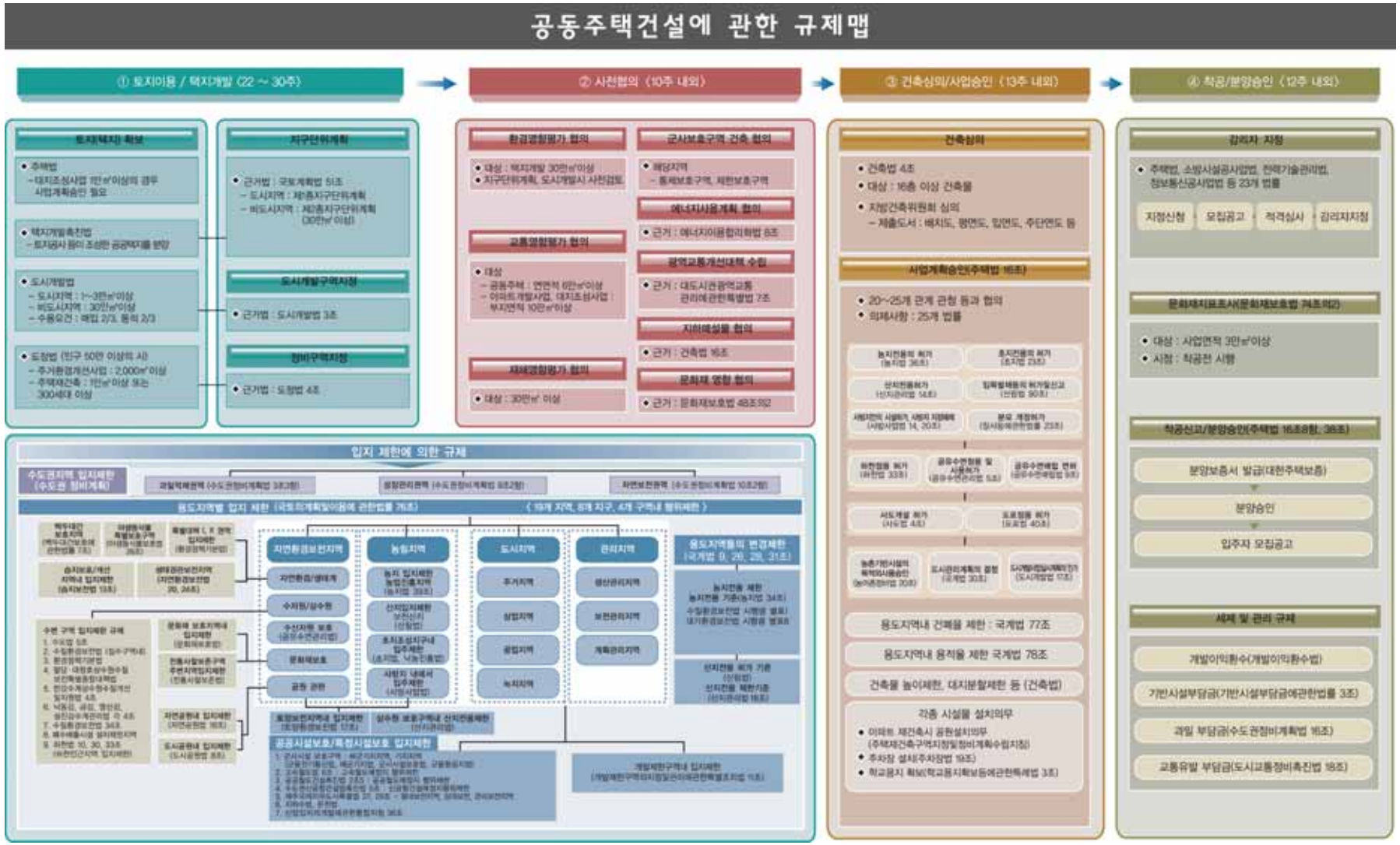
○ 대한민국을 찾는 **외국인**에게 필요한 **투자, 고용, 거주, 생활편의 정보**를 온라인 단일창구로 종합제공

※ 투자정보는 산업자원부, 고용정보는 노동부, 출입국 등 거주정보는 법무부에서 각각 주관하여 제공

○ **궁극적**으로 **외국인**에게 우리 국민과 **대등한 수준**의 정보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**'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구현'** 목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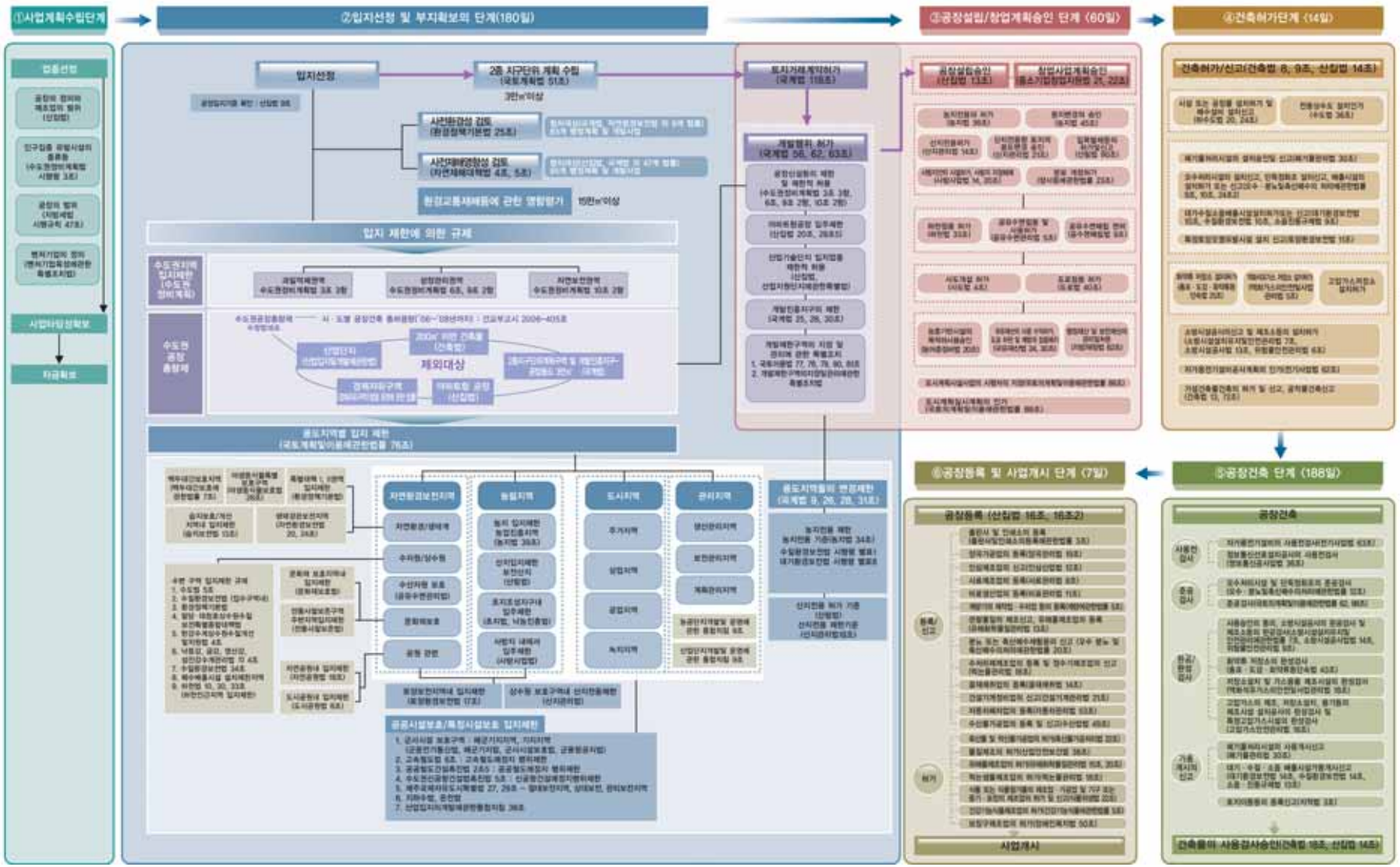
※ 이하 각 서비스 '기본화면', 참조

□ 규제맵 (국무조정실: 규제개혁위원회, www.rrc.go.kr)



('07.6.21, "수요자 중심의 법령체계도 구축" 기본계획, 혁신관리비서관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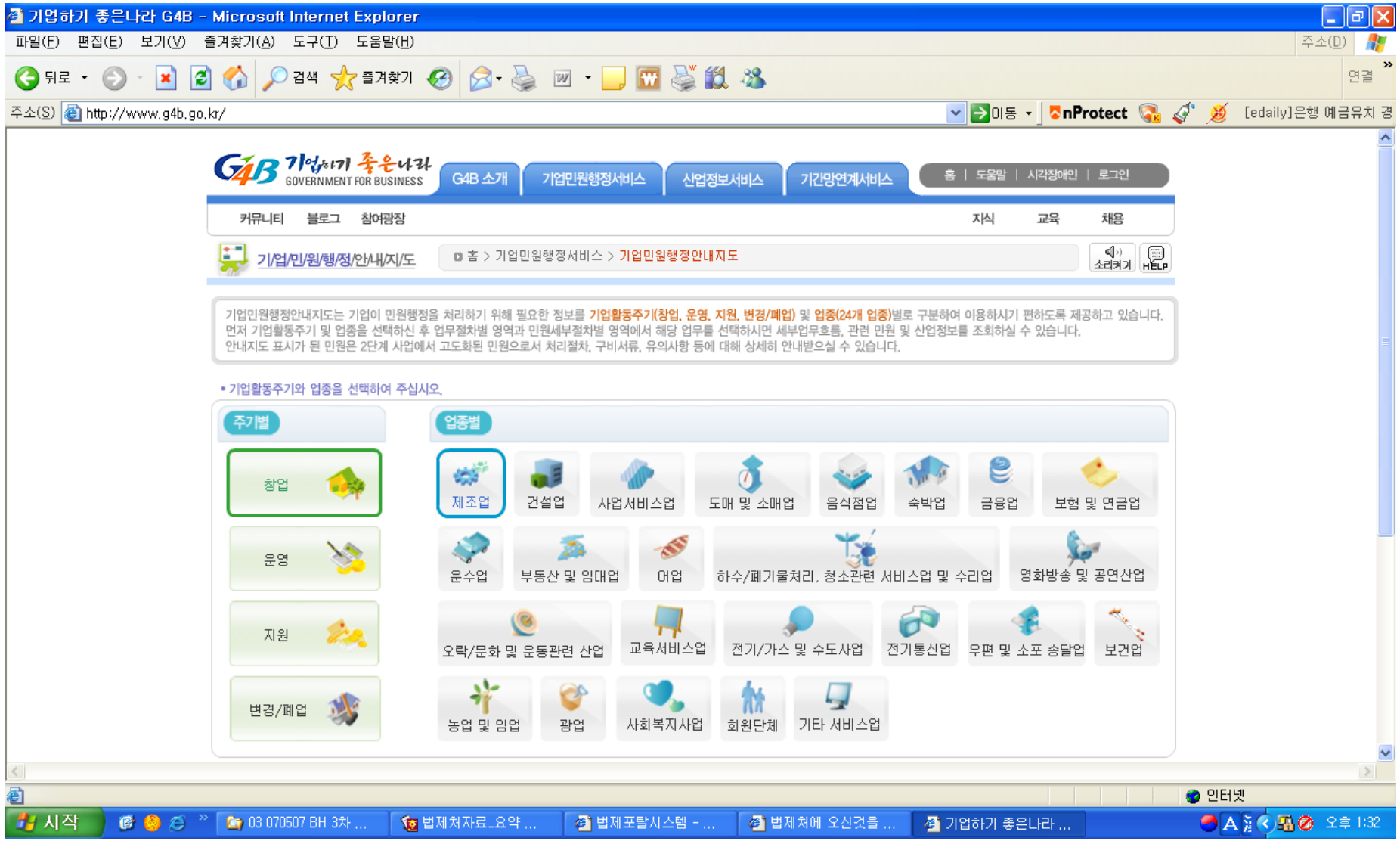
공장설립(개별입지)에 관한 규제맵



□ 중소기업 정책포털 (중소기업청, www.spi.go.kr)

□ 통합전자민원창구 (행정자치부, www.egov.go.kr)

□ 기업지원 단일창구 서비스(산업자원부, www.g4b.go.kr)



□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(산업자원부, 법무부, 노동부, www.g4f.go.kr)

('07.6.21, "수요자 중심의 법령체계도 구축" 기본계획, 혁신관리비서관실)

<붙임 3>

일반 음식점(신고) 창업자를 위한 '법령체계도' 기본화면

※ 일반 음식점 '신고'에 한정된 정보의 일부분 예시임

< 1 차 화 면 >

<창업 절차>

사전준비	영업신고	사업자 등 록	4대 보험 (종업원) …
▪ 보건 교육 ▪ 소방 검사 ▪ 가스 사용 ▪ 환경 시설 :	▪ 간판 신고 ▪ 주류 판매업 신고 ▪ 영업 신고	▪ 관할 세무서 ▪ 준비 서류	▪ 고용 ▪ 산재 ▪ 실업 ▪ 국민연금 (해당 경우) …

음식점업 법령관계도

온라인 1:1 상담

< 2 차 화 면 >

<일반음식점업 신고>

▪ 일반음식점의 영업 내용과 신고

– **영업 내용**: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업은 음식류를 조리·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임 [식품위생법 §7(8)]

– 신고 방법; 일반음식점업을 하려면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(별지 제25호서식)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

※ 필요 구비서류 (예시)
- 교육필증
- 소방 방화시설 완비증명서 (이하 생략)

< 3 차 화 면 >

<근거 규정>

▪ 식품위생법 §22⑤
제22조(영업의 허가 등) ⑤ 제21조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·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▪ 식품위생법 시행령 §13
제13조(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) ①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의 영업으로 한다.
7.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,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, 동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

▪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§27, [별지 제25호서식]
제27조(영업의 신고등)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1. 교육필증 (이하 생략)

▪ [법령 조문 정보 외에 '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'와 연결되는 법령 관련 정보 제공(예시)]: 신속한 업데이터 유지
- * 조문 설명서
- * 입법 취지
- * 법령용어 설명
- * 관련 법령해석 사례
- *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
- * 관련 대법원 판례
- *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

▪ 문서형식별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함
('별지 제25호서식 클릭 시 출력해서 바로 사용 가능)

('07.6.21, "수요자 중심의 법령체계도 구축" 기본계획, 혁신관리비서관실)

<붙임 4>

시범사업 대상 수요자의 선정 사유와 주요 구축 내용

1. 서비스업자 (일반 음식점업 창업)

○ 2006년말 기준으로 요식업중앙회에 가입된 **음식점업 영업자**만 약 44만명에 달하고 있는데, 그 **창업 수요**가 광범위하고, **국민 생활**에의 **파급 효과**도 매우 큼

※ FTA 협정 체결 등을 계기로 농업·축산업·어업 등으로부터 일반 음식점업으로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

○ 한편, **일반음식점업**의 경우 그 **규모**가 **작거나 영세**한 경우가 많아 **창업자**가 **전문적인 민간 법률서비스**를 제공받기 쉽지 않은 반면,

○ **인·허가 등**의 **규제**와, 각종 **지원행정**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**정확한 법령 정보**에 대한 수요가 높음

▪ **법령체계도**에는 창업자의 관점에서 **창업의 사전 준비 단계**에서의 보건교육, 소방검사, 가스사용, 환경시설, 입지 체크 등과 **영업 관련 신고**, **사업자 등록** 등 법령정보를 중심으로 한 관련 정보를 포함

2. 장애인 (고용) 관련

○ 2006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**장애인**(추정)은 232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나, **취업 차별**을 경험한 장애인이 42%에 이르는 등 **장애인**의 **고용 여건**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

※ 2차례(2000. 1., 2003. 7.)에 걸쳐 **장애**의 **범주**가 **확대**되는 등 앞으로 **장애인**의 **수**는 더 **증가**할 것으로 전망

○ 그러나, **복지수준 향상**을 위한 정부 노력이 계속되면서 **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**는 지속적으로 개선·보완되면서, 관련 **정보 수요**가 증가

- 상대적인 **정보격차**로 정보 접근이 어려운 **장애인**이 많으므로, 고용 관심 **장애인 관점**에서 신속·정확한 **법령 정보** 제공 필요

▪ **법령체계도**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의 범위·직종 등 **의무고용 제도 전반**, 「장애인 차별 금지법」에 따른 기회보장의 범위 등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**정부지원 근거 규정** 외에도 **각종 사업자 규제 조항** 포함

('07.6.21, "수요자 중심의 법령체계도 구축" 기본계획, 혁신관리비서관실)

3. 영유아 보육 관련자

○ 2006년말 기준으로 2만 8천여 **보육시설**에 약 100만명의 영유아가 있으며, 5세 미만 **영유아**가 약 269만명에 이를 정도로 **수요자**가 **광범위**

○ **여성**의 **사회 참여**가 활발해 지면서, **보육 관련 제도개선**과 **법령 정보 수요**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나,

- **보육 관련 법령**은 법령 외에 **조례, 지침 등**에도 분산되어 있고, 특히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, **건축 등 관계 법령**이 매우 많고 복잡

▪ **법령체계도**에는 영유아 보육 **관계 시설·제도**와 관련된 법령정보, **보육 시설**을 **설치·운영**하려는 자가 필요한 **관계 법령정보** 등을 포함

4. 운전면허 소지자

○ 2006년말 기준, **면허 소지자**는 2천 4백여만명으로 **수요자**가 **광범위**

○ 또한 **도로교통법령**은 비교적 복잡하지 않고 알기 쉽게 만들어졌으며, **관계 법령**도 적어서, **법령 정보**를 **체계적**으로 **분류**해서 제공할 경우 **수요자 만족도**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

※ **수요자의 입장**에서 체계적인 **법령체계도만 제공**받으면 **추가적인 민간 법률서비스**의 제공 없이도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

▪ **도로교통 관련 법령체계도**에는 **운전면허**(취득, 적성검사·갱신 등), **음주운전**, **교통사고**, **운전면허 취소 등 처분**(벌점, 면허정지, 면허취소, 과태료, 범칙금 등)과 **권리구제** 등을 포괄

5.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

○ **한미 FTA** 타결에 따라 **외국인 투자**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**법령체계도**를 제공함으로써 **투자 편의**를 높이고 **대외신인도 향상** 도모 가능

※ **대규모 외국인 투자**의 경우 **전문 법률자문**을 받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, **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의 투명성**은 **국가 대외신인도**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법령체계도 작성의 **의미는 클 것**으로 판단

▪ **법령체계도**에는 외국인의 **국내투자**, **법인 설립, 공장설립 및 기업 운영, 외국인 고용허가제** 등 포함